

#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제출하라”

### 文 대통령 지시... “군통수권자로서 사실 관계 파악” “靑 참모회의서 단순 언급... 지난달 28일 문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충북집회 당시 국군기무수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은 군 수사가 추상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가 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부수석실은 부대운영 지

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전체 제출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며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그날 회의로부터 2개월가량 흐른 지난달 28일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송 장관이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 설명했고, 토론 주제가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이었기에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특별수사단이 이미 수사하는 사안을 청와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수사와 별도로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수단의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李 총리 “난민 증가로 국민 걱정”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내에서도 올해 ISIS(이슬람국가) 가입을 권유하는 외국인 테러위험 인물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며 “중동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걱정도 적지 않게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정보협력과 공조를 긴밀히 하고

난민 심사를 비롯한 제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보완·강화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테러는 언제든 발생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라고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관계기관들은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생기면, 그 관련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늘 긴장감을 갖고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염동열 기소 50명 부정채용 압력... 중앙지검 사건 재배당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자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강원랜드 최홍진 전 사장으로 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 등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적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 해리스 미대사, 강외교 예방 “한국인들 팔벌려 환영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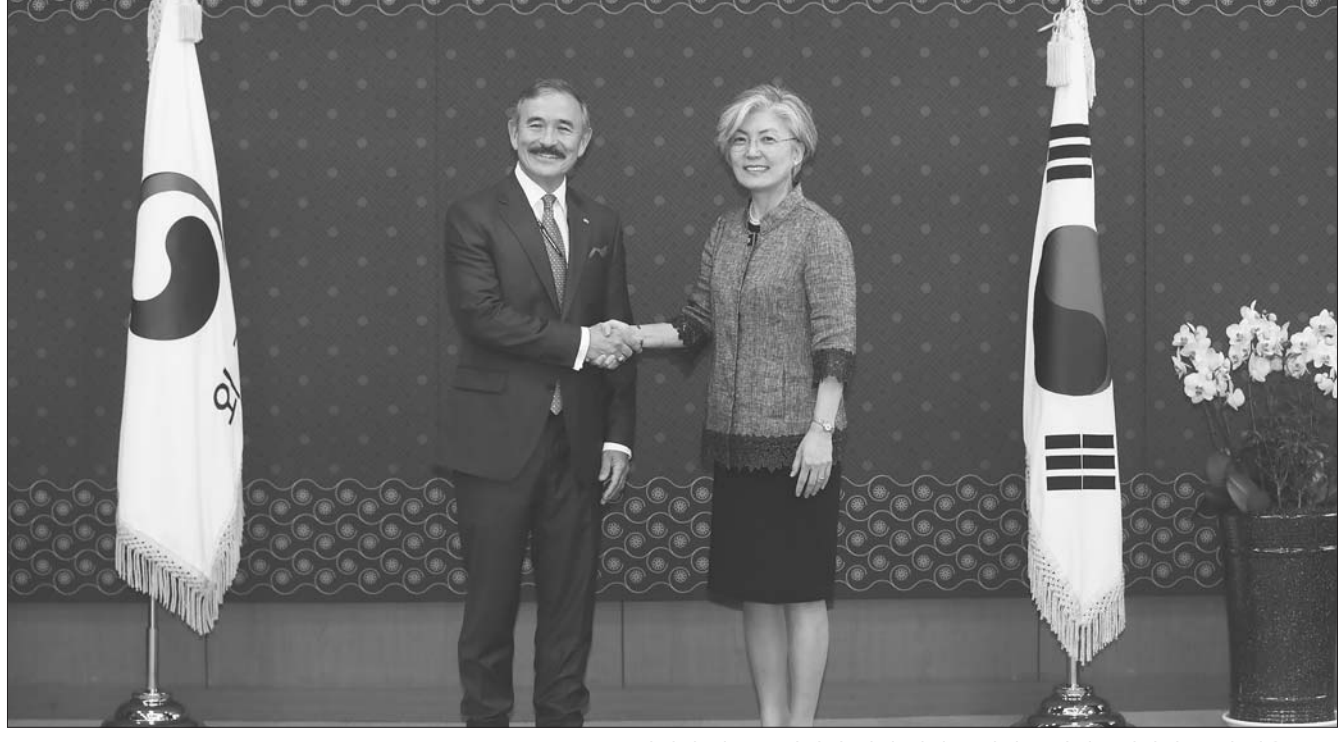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6일 강경화 장관을 예방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부임했지만 강 장관의 해외출장 일정 때문에 부임 인사를 겸한 만남은 이날에야 이뤄졌다.

작년 1월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주한미국대사 부재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기에 강 장관으로서는 1년 6개월만에 대사 대리가 아닌 정식 미국 대사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강 장관은 “이런 중대한 시기에 경험과 판단력 등을 갖춘 해리스 대사가 부임하게 된 것은 축복”이라고 밝힌 뒤 “대사와 전면적으로 협력할 나와 외교부를 믿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해리스 대사가 태평양사령관 신분으로 작년 8월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았을 때 자신이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상기하며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이제 (서울에서 장관과 대사 신분으로 재회하게 된 일) 훨씬 잘 된 일”이라며 웃었다.



강경화 장관과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환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올해 안으로 개헌안 합의해야”

국민개헌넷 70주년 제헌절 맞아... 정치권 촉구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는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개헌 합의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16일 정치권에 촉구했다. 국민개헌넷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약속 이행은 주권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민개헌넷은 “비록 6·13 지방선거에 발맞춘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헌법을 새롭게 개정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시라”고 촉구했다.

## 송갑석 “北여중업원 기획탈북 의혹 규명”

“과거 정보기관의 적폐사건... 현 정부가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북한 여중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과거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벌인 기획탈북이라는 사실이 유엔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록 전 정부의 일이지만 (현 정부가) 사실을 규명하려는 철저한 노력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이 지행

한 적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치졸한 북풍공작인 기획탈북으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3732500@

**서구 치평동 리치니스 빌딩 임대**

**1층 전용면적 286.36㎡(86.6평)**

구) 원조삼희불낙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0만원

☎ 062)673-2900  
Fax 062)673-2901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7호 전용면적 111.73㎡(33.7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